

---

# 중견기업 정책과제

- 국세청장 현장소통 간담회 -

---

2023. 5. 24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R&D·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..... | 1  |
| 2.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..... | 2  |
| 3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.....        | 4  |
| 4.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.....           | 6  |
| 5.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.....           | 8  |
| 6.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....   | 10 |
| 7.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.....         | 11 |
| 8.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 .....                 | 12 |
| 9. 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마련 .....             | 13 |
| 10. 세무컨설팅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.....         | 14 |
| 11.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조정 .....             | 15 |

## 1

## R&amp;D·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차등 운영 중

< R&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(%) >

|          | R&D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통합투자세액공제(시설투자 등)   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당기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증가분                  | 기본공제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추가공제<br>(기본공제<br>2배 한도) |
|          | 중소                       | 중견             | 그 외   |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                       | 중견    | 그 외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반연구개발   | 25                       | 8~15           | 2     | 중소 50,<br>40, 그 외 25 | 10(12)                   | 5(7)  | 1(3) | 3(10)                   |
| 신성장·원천기술 | 30~40                    | 25~40<br>(코스닥) | 20~30 | -                    | 12(18)                   | 6(10) | 3(6) | 3(10)                   |
| 국가전략기술   | 40~50                    | 30~40          | 30~40 |                      | 25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| 15   | 4(10)                   |
| 중견 적용범위  | 3년 평균 매출액 <b>5천억원 미만</b>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3년 평균 매출액 <b>3천억원 미만</b>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   ( )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'23년 1년간 한시 적용

-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R&D 및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세제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
-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.6%가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지만, 현행 중견기업 구간은 매출 규모에 따라 R&D 및 투자 세제지원을 차등

## □ 건의내용

- R&D 및 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,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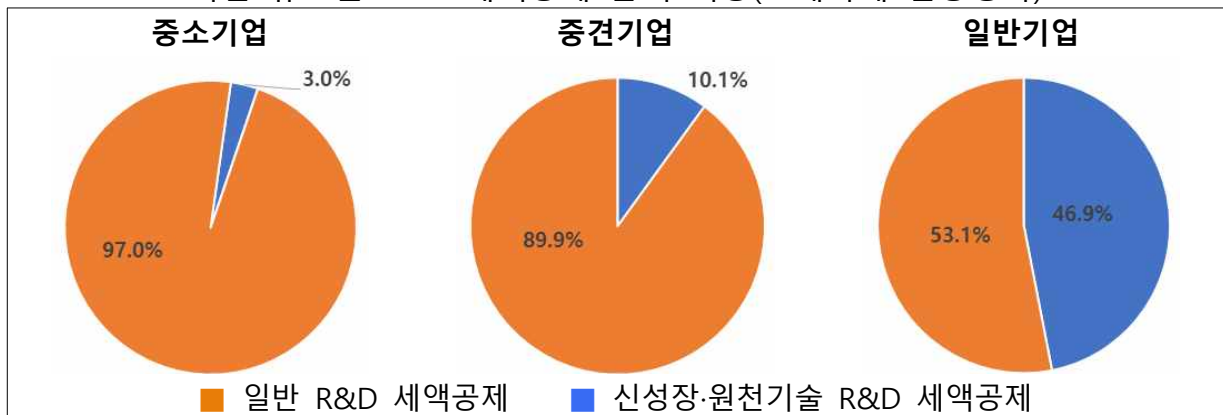
## □ 관련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,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4항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에 공통 비용이 있는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
  - 인건비 및 위탁·공동연구개발비
    - ① 신성장 R&D와 국가전략기술 R&D 공통 시 : 신성장 R&D 비용
    - ② 그 외 경우 : 일반 R&D 비용으로 구분
  - 재료비 등 : 일반, 신성장,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 기준으로 안분
- 국가전략기술·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을 병행생산하는 경우 3개 과세연도 동안 국가전략기술(신성장)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누적 생산량의 50%를 초과해야 국가전략기술(신성장)세액공제 적용
- 그러나 전체 R&D 세액공제에서 신성장 R&D가 차지하는 비중이 46.9%에 달하는 일반기업(대기업)과 달리 중소·중견기업의 신성장 R&D 비중은 각각 3.0%, 10.1%에 불과

< 기업 규모별 R&D 세액공제 금액 비중(조세특례 심층평가) >



- 중소·중견기업은 연구개발 인력 규모가 작아\*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전담인력 배치가 용이하지 않으며 공통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인건비에 대한 R&D 세액공제 안분이 필요
  - \* 중견기업 평균 R&D인력(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) : 11.0명(전체 인력의 4.3%)
- 특히 중견기업은 신성장-일반 R&D 세액공제의 공제율 격차\*가 크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공제금액\*\*이 타 기업군에 비해 미미한 수준
  - \* 중소기업 일반 R&D / 신성장 R&D 세액공제율/공제율 격차 : 25% / 30% / 5%
  - 중견기업 일반 R&D / 신성장 R&D 세액공제율/공제율 격차 : 8% / 20% / 12%
  - \*\* 기업규모별 신성장, R&D세액공제 금액 : 중소 625억원, 중견 249억원, 일반 4,751억원
- 또한,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상용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R&D 착수단계인 중소·중견기업이 병행생산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요건\*을 충족시키기 어려움
  - \* 국가전략기술 생산제품이 3개 과세연도 누적 생산량의 50%를 초과할 것
- 중소·중견기업이 폭넓게 제도를 활용하여 신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&D 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선할 필요

## □ 건의내용

- 공통 인건비도 재료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
- 병행생산 시설에 대한 중소·중견기업 사후관리요건 완화
  - (현행) 총 생산량 대비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비중 50% 이상 ⇒ (건의안) ① 대기업 50% 이상, 중소·중견기업 30% 이상
  - ② 중소·중견기업 일반·국가전략기술 생산 비중으로 안분하여 공제
    - \* (예시)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제품 90%, 국가전략기술(신성장) 제품 10% 생산 시 90%는 일반투자세액공제, 10%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

## □ 관련법령

-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7조

## □ 현 황

- 청년,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% 감면(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%)('23.12.31까지,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)

## □ 문제점

- 새 정부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는 역행적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상시화하는 등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여 혁신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 과제를 발표

\* "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"(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,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 과제 중 17번, '22.5월)

- 조세특례제한법 내 대다수의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
- 특히, "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" 등의 일부 제도는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,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→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

\* 중소→중견 성장 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: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,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,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

-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거나 초기 중견기업(매출액 3천억원 미만)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66.3%<sup>\*</sup>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

\* [대기업 대졸초임] 5,084만원(경총,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·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, '21.10월)  
[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] 3,372만원(중견연,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공)

- 실제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 애로사항 및 이직 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

\* 중견기업 신규채용 애로사항 2순위 :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(16.4%),  
중견기업 근로자 이직원인 1순위 : 낮은 임금수준(18.1%)

- 또한, 구직자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인재영입 애로가 가중될 우려

\* 기업규모별 제조기업 비중(통계청, '19년 결산 기준 영리법인 통계) :  
중소기업 20.1%, 중견기업 38.5%, 대기업 20.7%

-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하여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

## □ 건의내용

- 일몰 연장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)에 대해 기업승계 시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
  - \*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, 20년 이상 400억원, 30년 이상 600억원
-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,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황
  -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중견기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대를 이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
- 그러나,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

&lt;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&gt;

| 구 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11   | '12   | '13   | '14    | '15    | '16    | '17    | '18    | '19    | 평균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한 국 | 가업상속<br>공제 건수(개)                 | 46    | 58    | 70    | 68     | 67     | 76     | 91     | 103    | 88     | 74    |
|     | 가업상속<br>공제 금액(억원)                | 325   | 343   | 933   | 986    | 1,708  | 3,184  | 2,226  | 2,344  | 2,363  | 1,601 |
| 독 일 | 가업상속<br>공제 건수(개)                 | 5,123 | 6,124 | 8,061 | 10,141 | 11,085 | 11,885 | 10,747 | 10,311 | 11,368 | 9,427 |
|     | 가업상속<br>공제 금액(백만유로)              | 4,412 | 3,733 | 3,713 | 6,439  | 4,753  | 5,208  | 6,881  | 4,029  | 3,047  | 4,691 |
| 영 국 | 2011-2018년 평균 2,620건, 1,801백만파운드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
\* 코스닥협회, 「중소·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」, '21.5월

- 특히,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 경영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
  -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,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창출 및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

\*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16명을 고용하는데 반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,096명을 고용(중견기업 통계, '21년도 결산기준)

- 해외 주요국들은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거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

<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>

| 국가명  | 직계비속<br>명목 최고세율 |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   | 실제 부담<br>최고 세율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스페인  | 34%             |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% 공제<br>(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)              | 1.7%           |
| 벨기에  | 30%             | 일정 지분, 자본금 유지 등<br>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0%           |
| 아일랜드 | 33%             | 주식가치의 90% 공제   | 3.3%           |
| 네덜란드 | 20%             |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%(107만<br>유로 초과)~100%(107만 유로 이하) 공제 | 3.4%           |
| 독일   | 30%             |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~100% 공제  | 4.5%           |
| 프랑스  | 45%             |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%까지 공제  | 11.3%          |
| 영국   | 40%             | 상장주식 50%, 비상장주식 100% 공제  | 20.0%          |

\* EY한영,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, 2018

## □ 건의내용

-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(매출액 5천억원 미만 → 1조원 미만) 및 공제한도(최대 6백억원 → 최대 1천억원) 확대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
  - \*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
-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전·사후 요건 등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
-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해왔음에도 기업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
 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등 전통산업은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, 서비스업은 한정된 업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

#### <제조업-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>

| 표준산업분류(대분류 기준)            | 가업 해당 업종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광업(05~08)                 | 광업 전체   |
| 제조업(10~33)                | 제조업 전체<br>(단, 직접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세부요건 충족 필요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설업(41~42)                | 건설업 전체  |
|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~73)   | 연구개발업(70), 광고업(713)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(714) 등 5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 |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, 고용알선 및<br>인력공급업(751)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(7531) 등 7개 업종 |
| 교육서비스업(85)                | 유아 교육기관(8511), 사회교육시설(8564) 등 4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특히, 서비스업은 동종·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

| 사례  |  |
|---|--|
| ○ C사는 인력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, 청소,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업체와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음(표준산업분류상 "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74~75)"에 해당)   |  |
| ○ 그러나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"소독,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(74220)"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(단, "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(74212)", "고용알선업(75110)" 등 일부 부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)으로, 유사·동종사업("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(7421)", "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(751)" 등)을 영위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|  |
| ○ 리조트에 속해있는 골프장은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가업에 해당하지만, 일반 골프장의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 |  |

-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·금융·재정 등 지원 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가업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
  - \*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(120대 국정과제, '22.7월)
-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백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

## □ 건의내용

-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  - **全**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\*만 별도 규정
  - \*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금전, 유가증권,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\*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,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

\* 금전, 유가증권, 납세보증보험증권, 납세보증서, 토지,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, 건설기계 등

- 비상장 중견기업(83.1%)\*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 마련을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

\* 중견기업 현황('21년 결산기준) : **비상장 4,555개(83.1%)**, 코스피 453개(8.3%), 코스닥 467개(8.5%), 코넥스 5개(0.1%)

-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

-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

\*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(홍석준의원안, 의안번호 제2104118호)

## □ 건의내용

-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600억원 한도\*로 10%(과세표준 60억원 초과 시 20%) 특례세율을 적용하고, 한도 초과액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(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)

\* 가업영위기간 : 10년 이상 300억원, 20년 이상 400억원, 30년 이상 600억원

-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연부연납제도를 운영 중이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에 애로

|     |   |
|-----|---|
| 상속세 |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 : 10년간 분할납부(3년 거치 가능)<br>50% 이상 : 20년간 분할납부(5년 거치 가능) |
| 증여세 | 5년간 분할납부(거치기간 없음)   |

- 중견기업은 과세특례 한도 확대에도 증여세 부담액이 커 5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우며,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이로 인한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에 노출 우려

### (예) 1천억원을 증여받은 중견기업의 경우

#### ○ 증여세 부담 세액 : 307.4억원

\* 특례한도(600억원) 세액: 6억원(60억원 이하 10%) + 106억원(60억원 초과분 20%)

특례 한도 초과분(400억원) 세액: 195.4억원(10~50% 누진세율)

#### ○ 5년 간 연부연납시 매년 61.5억원 납부(거치기간 없음)

\* 편의상 특례한도를 최대로 적용하여 계산

## □ 건의내용

- 안정적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동일한 수준(최대 20년)으로 확대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세청은 조사주기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와 신고내용에 따라 수시로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지방정부 또한 지방법인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 실시
  - \* '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법인소득세가 기존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으로써 지자체가 지방법인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시행 중
- 정부는 기업의 회계 성실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, 선정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 가중
  - 불성실도를 측정하는 기준 및 전반적인 선정 절차를 공개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
- 국세와 지방세는 동일한 세원과 과세표준을 토대로 부과됨에도 불구하고, 국세청과 지자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중복 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심화

## □ 건의내용

- 세무조사 선정 대상 기준 명확화
- 지방법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주체를 국세청으로 단일화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국세통계의 중견기업은 일반법인에 포함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중견기업 R&D 및 투자 세액공제 현황 등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활용현황 등 실태 파악이 어려워 중견기업 정책 수립의 한계

### □ 건의내용

- 국세통계의 중견기업 별도 구간을 신설하여 통계자료 제공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·감면\* 및 가업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공
  - \*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 제도: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
  - \*\* 가업승계세무컨설팅 :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기 승계 기업에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('22.6.23 국세청 보도자료)
- 세무역량이 부족한 중견기업도 세무쟁점이 발생했을 때 세법상 규정이나 적절한 처리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
- 또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R&D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,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세제지원 요건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R&D 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

## □ 건의내용

- 세무컨설팅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, R&D 세제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

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(이하 가산세)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%를 적용(국세기본법 시행령 §27의 4)
-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이자율로 적용\*하고 있어 가산세가 징벌적 성격이지만 연 8.03%를 부과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음

\* 국세기본법 시행령 §43의 3

### □ 건의내용

-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이자율 완화